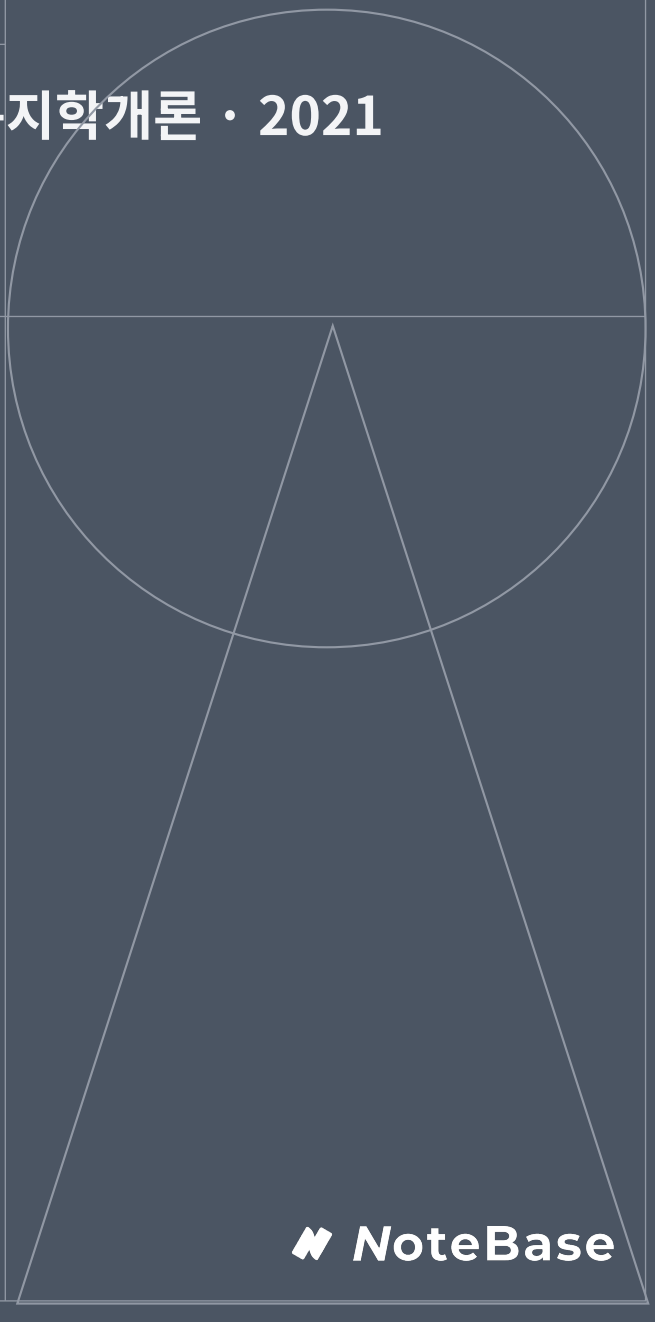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21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21

문 1.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원칙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별주의는 보편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② 선별주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등이 포함된다.

③ 보편주의는 일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 급여를 제공한다.

④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에 비해 수급자 선정을 위한 행정적 비용이 적게 든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장애연금은 저소득층을 자산조사로 선별하여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 가입 이력과 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므로 선별주의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선별주의는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한정된 재원을 **저소득층에 집중**하므로, 같은 규모의 재원을 넓게 배분하는 경우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미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본다.

② 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등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선별주의 제도이다. 그러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사회보험 급여**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초진일·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급된다. 저소득 여부를 자산조사하여 지급하는 선별주의 급여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③ O: 보편주의는 빈곤 여부를 조사하여 일부만 선별하는 대신, 연령 등 **일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 급여를 제공한다. 여기서 보편성은 반드시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급여를 준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범주 안에서는 소득·재산에 따른 선별 없이 포괄한다는 뜻이다.

④ O: 선별주의는 대상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자격 변동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편주의는 이러한 **자산조사와 선별 심사 부담이 작으므로** 수급자 선정에 드는 행정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급여 지출 총액이 적다는 뜻과는 구별된다.

NoteBase

문 2. 사회복지실천에서 면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활한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라포(rapport) 형성이 중요하다.

② 초기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며, 차츰 폐쇄형 질문을 해야 한다.

③ 클라이언트가 질문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 역시 일종의 의사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는 면접 시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표현과 함께 비언어적 표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는 질문 유형의 사용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한 점이 부적절하다. 초기에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답하기 쉬운 폐쇄형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점차 **개방형 질문**으로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라포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형성되는 **신뢰와 친밀감에 기초한 관계**이다. 클라이언트가 존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끼면 자신의 어려움과 감정을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면접의 바탕이 된다.

② X: 폐쇄형 질문은 '예·아니요'나 짧은 사실로 답하게 하는 질문이고, 개방형 질문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설명하도록 하는 질문이다. 초기부터 자유롭게 말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클라이언트에게는 간단한 폐쇄형 질문으로 응답을 돕고, 관계가 형성되면 개방형 질문으로 이야기를 넓혀 갈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개방형, 차츰 폐쇄형 질문을 해야 한다'고 사용 순서를 고정할 수 없다. **클라이언트의 상태와 질문의 목적에 맞게 두 유형을 조절**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때는 면접 도중에도 폐쇄형 질문을 활용한다.

③ O: 침묵도 **감정이나 태도를 전달하는 의사표현**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정리하거나 감정을 감당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말하기를 주저하는 반응일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는 침묵을 곧바로 거부로 단정하거나 대답을 재촉하지 말고, 앞뒤 대화와 표정 등을 함께 살펴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④ O: 표정, 시선, 자세, 몸짓, 목소리의 어조 같은 비언어적 표현은 말의 의미를 보완하며 클라이언트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따라서 **말의 내용과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관찰**해야 한다. 두 표현이 어긋나더라도 특정 감정으로 단정하지 말고 맥락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확인한다.

NoteBase

문 3. 서구의 사회복지 관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 작업장 수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② 길버트법은 구빈을 조직화하여 구빈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빈민의 원외구호를 인정하였다.

③ 스핀햄랜드법은 임금보조제도를 운영하여 구빈세 부담을 감소시켰다.

④ 나치블법은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구빈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스핀햄랜드법은 생계에 부족한 임금을 **구빈세로 보충**하는 제도였다. 고용주의 저임금 부담을 구빈재정이 떠맡게 되어, 구빈세 부담을 줄이기보다 **증가시키는 문제**를 낳았다.

선지별 해설

① O: 신구빈법(1834년)의 기본 원칙은 열등처우, 균일처우, 작업장 수용이다. 열등처우는 구호받는 빈민의 생활조건을 **최하층 독립 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뜻이다. 균일처우는 중앙의 통제 아래 지역마다 달랐던 구빈행정을 통일하는 것이며, 작업장 수용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원외구호를 제한하고 작업장 안에서 구호하는 원칙이다.

② O: 길버트법(1782년)은 여러 교구가 연합하여 구빈시설과 행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구빈행정의 조직화와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노인·환자·아동 등은 시설에서 보호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원외구호**를 인정하였다. 원외구호는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지원받게 하는 방식이다.

③ X: 스핀햄랜드법(1795년)은 빵 가격과 가족 수를 고려하여 정한 생계기준에 실제 임금이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구빈세로 보충하는 임금보조제도였다. 고용주가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교구가 차액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저임금을 유지하게 하고 구빈재정의 부담을 늘리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구빈세 부담을 감소시켰다'는 **'구빈세 부담을 증가시켰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나치블법(1723년)은 교구가 작업장을 설치하고, 구호 신청자에게 **작업장 입소와 노동을 구호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거부하면 구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작업장 심사를 통해 구호 신청을 억제하고, 노동으로 유지비를 충당하게 하여 구빈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NoteBase

문 4. 윤리원칙 심사표(EPS)에서 제시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① 자율성 및 자유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원칙에 우선한다.

② 최소 손실의 원칙은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③ 삶의 질의 원칙은 최소 손실의 원칙에 우선한다.

④ 진실과 완전공개의 원칙은 생명보호의 원칙에 우선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윤리원칙 심사표(EPS)에서 자율성 및 자유의 원칙은 3순위,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원칙은 6순위이다. 따라서 두 원칙이 충돌하면 **자율성 및 자유의 원칙이 우선**한다.

선지별 해설

윤리원칙 심사표(EPS)는 윤리적 원칙들이 충돌할 때 더 높은 순위의 원칙을 우선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순위의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① O: 자율성 및 자유의 원칙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3순위이다.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보호하는 비밀보장 원칙은 6순위이므로, EPS에서는 **자율성 및 자유가 비밀보장보다 우선**한다.

② X: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이 최소 손실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은 동등하게, 서로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은 그 차이를 고려하여 대우해야 한다는 것으로 2순위이다. 피해를 피하기 어려울 때 피해가 가장 적은 대안을 선택하는 최소 손실의 원칙은 4순위이다.

③ X: **최소 손실의 원칙이 삶의 질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최소 손실의 원칙은 불가피한 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4순위이고, 삶의 질의 원칙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으로 5순위이다. 두 원칙이 충돌하면 삶의 질 향상보다 피해의 최소화를 앞세운다.

④ X: **생명보호의 원칙이 진실과 완전공개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생명보호는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가장 높은 1순위이고, 진실과 완전공개는 사실을 정직하고 충분하게 알리는 것으로 7순위이다. 두 원칙이 충돌하면 사실 공개보다 생명보호를 앞세운다.

NoteBase

문 5.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부효과
ㄴ. 정보의 비대칭성
ㄷ. X-비효율성
ㄹ. 불완전 경쟁
ㅁ. 정부조직의 내부성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경쟁과 성과 유인이 약한 정부조직의 X-비효율성과 조직 자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내부성은 **정부실패**의 요인이다. 시장실패는 시장의 가격기구만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활동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주지만, 그것이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공장 오염의 피해 비용을 공장이 부담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 된다.

ㄴ. O: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이나 질이 다른 상태이다.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위험을 보험회사보다 잘 아는 경우처럼 정보 격차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효율적인 거래와 자원배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

ㄷ. X: X-비효율성은 조직 내부의 동기나 관리 문제로 주어진 자원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다. 정부조직에서는 경쟁 압력과 성과 유인이 약해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노력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는 **정부실패의 요인**으로 분류한다. 이 문항에서 묻는 시장실패의 원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O: 불완전 경쟁에서는 독점기업처럼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일 수 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ㅁ. X: 정부조직의 내부성은 공익보다 예산 확대, 조직의 권한이나 구성원의 이익 등 **조직 내부의 목표를 우선**하는 경향이다. 국민의 필요보다 조직의 이익에 맞춰 자원을 사용하게 되므로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요인이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ㄱ · ㄴ · ㄹ이며, 이를 묶은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6.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집단론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은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며, 이 과정에서 이익집단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국가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한다.

② 확산이론에 따르면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선진 복지국가의 영향을 받아 사회보장을 확대한 경우, 이는 공간적 확산에 해당한다.

③ 음모이론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목적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에 있다.

④ 수렴이론에 따르면 산업기술이 발달할수록 사회복지가 발달하며, 한 국가의 복지수준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선진 복지국가의 영향을 받아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것은 **위계적 확산**에 해당한다. 공간적 확산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 사이**에서 제도가 전파되는 것을 말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익집단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자원 배분을 둘러싼 여러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결과로 본다. 각 집단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요구하며, 국가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중재자**로서 집단 간 요구를 조정한다고 설명한다.

② X: 확산이론은 한 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국가에 전파되거나 모방되면서 사회복지가 발달한다고 본다. 선진 복지국가의 제도를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받아들이는 것은 **위계적 확산**이다. 공간적 확산은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이웃 국가에 제도가 퍼지는 경우이므로, 선지의 '공간적 확산'을 '위계적 확산'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음모이론은 지배층이 사회불안을 완화하고 기존 지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활용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복지 제공의 주된 목적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이며, 기존 질서가 유지됨으로써 지배층이 이익을 얻는다고 설명한다.

④ O: 수렴이론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사회복지 발달의 핵심 요인으로 본다. 산업화는 실업·산업재해 등 복지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통해 복지에 사용할 재원을 확대한다. 이처럼 **복지 욕구와 재원의 증가**가 복지 발달을 이끌기 때문에,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은 복지수준도 비슷해지는 방향으로 수렴한다고 설명한다.

NoteBase

문 7.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절성이란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 등이 클라이언트 문제해결에 충분할 만큼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② 지속성이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 해결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 신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③ 평등성이란 사회복지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연령, 성별, 지역, 종교 등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④ 통합성이란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하므로 이러한 욕구충족을 위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괄성**에 대한 설명이다. **통합성**은 여러 서비스가 서로 연계·조정되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적절성은 서비스의 양과 질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그 양이 부족하거나 질이 낮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적절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O: 지속성은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동안 **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욕구의 변화로 서비스의 종류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면, 기존 서비스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여 지원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

③ O: 평등성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연령·성별·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서 부당한 차별을 배제한다는 의미이다.

④ X: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갖추어 제공하는 것은 **포괄성**이다. 통합성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서비스와 제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돌봄서비스를 두루 제공하는 것은 포괄성에, 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공동의 지원 계획에 따라 협력하는 것은 통합성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사회복지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점증모형은 기존의 정책에서 소폭의 수정·보완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ㄴ. 쓰레기통모형은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등의 4요소가 우연히 만나게 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이다.
ㄷ. 혼합모형은 최적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하여 현실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이다.
ㄹ. 합리모형은 정책결정 체계의 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과 직관, 창의력 등 초합리적 요소를 중요하게 간주하는 모형이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하여 기본 방향은 합리적으로 정하고 세부 사항은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경제적 합리성에 직관·창의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결합하는 것은 **최적모형**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출발점으로 삼아 **소폭의 수정·보완**을 거쳐 대안을 선택한다. 모든 대안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검토하기보다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안들을 비교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ㄴ. O: 쓰레기통모형은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라는 네 흐름이 **우연히 결합**하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문제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순서대로 찾는다고 가정하지 않으며, 이미 존재하는 해결책이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ㄷ. X: 혼합모형이 절충하는 대상은 최적모형과 점증모형이 아니라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이다.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결정에는 폭넓은 합리적 검토를 적용하고, 그 방향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부 결정에는 점증적 조정을 적용한다.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는 설명은 만족모형의 특징이다.

ㄹ. X: 경제적 합리성과 직관·창의력 등 초합리적 요소를 함께 중시하여 정책결정 체계의 성과를 최적화하려는 것은 **최적모형**이다. 합리모형은 충분한 정보와 분석 능력을 전제로 가능한 대안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ㄴ이며, 이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9.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급여 수급자나 가족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① 국민연금
② 고용보험
③ 국민건강보험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답 4번

①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는 **본인이 기여금을 부담**하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낸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도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 · 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25.4.2>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25.4.2>

②

고용보험에서는 **가입자인 근로자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부담액은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을 곱한 금액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2026.3.17>

NoteBase

③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4.1.1>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④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나 그 가족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6.4, 2017.10.24, 2026.3.17>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NoteBase

문 10.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지행동 접근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인지 재구성에 초점을 두고 인지 및 행동의 수정을 위한 훈련을 강조한다.

② 강점관점은 문제중심관점과 대치되는 시각으로, 클라이언트의 강점에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까지 포함된다.

③ 증거기반실천은 과학적 조사연구를 평가하고 응용하여 사회복지실천의 결과를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해결중심 접근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과거, 현재,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모든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는 설명은 해결중심 접근법의 특징과 다르다. 해결중심 접근법은 **원하는 미래와 이미 효과가 있었던 해결 방법**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변화를 돕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인지행동 접근법은 상황을 해석하는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비합리적이거나 왜곡된 생각을 확인하고 현실적이고 적응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인지 재구성**과 함께, 새로운 행동을 연습하는 훈련을 활용한다.

② O: 강점관점은 클라이언트를 결함이나 문제만으로 파악하지 않고, 변화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가진 존재로 본다. 강점에는 개인의 경험·능력·의지뿐 아니라 가족의 지지, 사회적 관계망, 지역사회 자원과 같은 **사회적·환경적 자원**도 포함된다.

③ O: 증거기반실천은 실천방법의 효과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찾아 그 신뢰성과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실천에 활용하는 것이다. 단순히 관행이나 직관에 따르지 않고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 근거**를 검토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다. 이때 실천가의 전문성과 클라이언트의 가치·선호 및 상황도 함께 고려한다.

④ X: 해결중심 접근법은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원인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미래를 구체화하고, 문제가 없었거나 덜했던 **예외 상황**에서 이미 작동한 방법과 강점·자원을 찾아 작은 변화를 확대한다. 따라서 선지의 문제 및 영향 요인 분석 중심 설명은 원하는 변화와 해결 방법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1. 잔여적 사회복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② 현대사회에서 가족과 시장은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발생은 당연하다.

③ 사회복지는 권리가 아닌 시혜이며 수급자는 병리적인 존재이다.

④ 빈곤, 실업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사회구조적 모순에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잔여적 관점은 생활 문제의 책임을 주로 개인에게 돌리므로, 사회복지를 **권리보다 시혜**로 이해하고 수급자를 정상적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병리적 존재로 간주**한다. 이는 이 관점의 수급자 인식을 설명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사회복지를 사회 유지에 필요한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제도로 보는 것은 **제도적 관점**이다. 잔여적 관점은 가족과 시장을 기본적인 욕구 충족 기제로 보고, 이들이 기능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일시적·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② X: 가족과 시장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제도적 관점이다. 잔여적 관점은 가족과 시장이 대체로 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전제하고, **예외적으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회복지가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③ O: 잔여적 관점은 빈곤과 생활 곤란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부적응 등에서 찾는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시민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보다 **시혜나 자선**으로 이해하고, 수급자를 정상적인 가족·시장 체계에 적응하지 못한 병리적 존재로 간주한다. 이런 인식은 수급자에게 낙인을 부여하기 쉽다.

④ X: 빈곤과 실업의 주된 원인을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찾고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제도적 관점이다. 잔여적 관점은 사회구조보다 **개인의 책임과 부적응**을 강조하며, 지원도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보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NoteBase

문 12. 서구사회의 사회복지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 행정제도를 공식화하였다.

② 19세기 말 영국의 자선조직협회(COS)는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의 노력에 의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민간 중심의 구빈활동을 전개하였다.

③ 인보관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의 주체는 박애사상을 실천하려는 저소득 노동계층으로 빈민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빈민의 생활 개선과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다.

④ 1940년대 이후 약 30년에 걸친 복지국가 황금기의 주요 기반으로는 장기호황을 들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인보관운동의 주된 주체는 저소득 노동계층이 아니라 **대학생·지식인 등 교육받은 중산층**이었다. 이들이 빈민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과 교류하고 교육·생활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호를 사적 자선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차원의 공적 책임**으로 제도화하였다. 교구가 구빈세를 거두고 구빈감독관을 통해 구호를 집행하도록 하여 공적인 빈민구호 행정체계를 마련하였다.

② O: 19세기 말 영국의 자선조직협회는 국가의 구호 확대보다 **민간 자선과 개인의 자립**을 중시하였다. 여러 자선단체의 활동을 조정하고 신청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중복 구호를 줄이는 등 민간 중심의 조직적인 구빈활동을 전개하였다.

③ X: 인보관운동의 주된 주체는 **대학생·지식인 등 교육받은 중산층**이었다. 저소득 노동계층은 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지원하고자 했던 주민들이므로, 운동의 주체와 대상이 뒤바뀌었다. 활동가들은 빈민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문화 활동과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

④ O: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이어진 **장기호황**은 복지국가 황금기의 주요 경제적 기반이었다. 높은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가 조세 수입과 복지 재원을 뒷받침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할 수 있었다.

NoteBase

문 13. 사회복지급여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해 수급자의 선택권이 더 제한된다.

②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정책의 목표효율성이 더 우수하다.

③ 바우처는 현물급여에 비해 수급자의 선택권이 더 제한된다.

④ 기회와 달리 권력은 사회복지급여의 유형이 아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현물급여는 정책 목적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급여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현금급여보다 정책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인 목표효율성이 높다.

선지별 해설

① X: 현금급여는 돈을 지급하여 수급자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고르게 하므로 **현물급여보다 선택권이 넓다**. 현물급여는 제공되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정해져 있어 수급자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② O: 목표효율성은 급여가 정책이 의도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정도를 뜻한다. 현물급여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므로 **정책 목적에 맞는 소비를 유도**하기 쉽다. 예를 들어 영양 개선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면, 현금을 지급할 때보다 지원이 식사 외의 용도로 쓰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③ X: 바우처는 정해진 용도 안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현물급여와 달리, 허용된 범위에서 제공기관이나 서비스를 고를 수 있으므로 **현물급여보다 선택권이 넓다**. 다만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어 현금급여보다는 선택권이 좁다.

④ X: **기회와 권력은 모두 사회복지급여의 유형**이다. 기회급여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에 교육이나 취업 등의 기회를 우대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권력급여는 수급자가 정책이나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자원 배분과 서비스 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NoteBase

문 14.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특성이론은 효과적인 리더의 개인적 성향이나 형질을 규명하는 작업에 집중한다.
ㄴ. 관리격자이론은 사람과 일(생산)에 대해 적절히 균형을 갖는 중용형(5,5)을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으로 간주한다.
ㄷ.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서는 상황을 크게 부하의 상황과 업무환경에 관련된 상황으로 구분한다.
ㄹ. 허시(Hersey)와 블랜챠드(Blanchard)의 상황이론에서는 부하가 업무능력은 없지만 업무수행 의지는 있는 경우, 참여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관리격자이론이 이상적으로 보는 유형은 사람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팀형(9,9)**이다. 업무능력은 부족하지만 수행 의지가 있는 부하에게는 구체적인 업무 안내와 정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설득형 리더십**이 적합하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특성이론은 효과적인 리더에게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을 찾아 리더십을 설명한다. 지능, 자신감, 책임감 등 리더가 지닌 성향이나 자질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ㄴ. X: 관리격자이론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을 각각 평가한다. 중용형(5,5)은 두 관심을 중간 수준에서 절충하는 유형이다. 이 이론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것은 두 관심을 모두 높은 수준으로 추구하는 **팀형(9,9)**이다.

ㄷ. O: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은 리더가 목표 달성 경로를 분명히 하고 장애물을 줄여 부하의 동기를 높인다고 본다. 효과적인 리더 행동을 결정하는 상황요인은 **부하의 특성과 업무환경의 특성**으로 구분한다. 부하의 능력·경험·통제위치 등이 전자에, 과업구조·공식적 권한체계·작업집단 등이 후자에 해당한다.

ㄹ. X: 허시와 블랜챠드의 상황이론은 부하의 업무능력과 수행 의지에 맞추어 리더십 유형을 선택한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의지는 있는 부하에게는 업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면서 동기와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설득형**이 적합하다. 이는 과업행동과 관계행동이 모두 높은 유형이다. 참여형은 능력은 있지만 의지나 자신감이 부족한 부하에게 적합하며, 과업행동은 낮고 관계행동은 높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ㄷ이므로, 이 둘을 묶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유형 중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필요성으로 옳은 것은?

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②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의 우선적 추구

③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④ 대량공급을 통한 규모의 경제 이점 실현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민간부문은 다양한 기관이 이용자의 서로 다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공공부문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개별적·다양한 욕구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개념 구분

민간부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민간기관이 복지서비스를 전달한다. 기관마다 대상과 사업 내용, 제공 방식이 달라 이용자가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여지가 커진다. 따라서 **서비스의 다양성과 이용자의 선택 기회 확대**가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공공부문과의 구분: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의 우선적 추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대량공급에 따른 규모의 경제는 주로 **공공부문 전달체계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공공부문은 국가의 책임 아래 필요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이나 소득에 따른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공적 재원과 전국적 조직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 가고 여러 욕구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공급하여 단위당 비용을 낮출 수 있다.

NoteBase

문 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각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자격을 갖추고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함)

① 치과의사
② 작업치료사
③ 교정직 공무원
④ 성매매피해상담소 소장

정답 3번

①

치과의사는 의료인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의사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 도, 시 · 군 ·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 2022.12.27, 2023.7.18, 2024.12.20, 2025.4.22, 2025.11.11, 2026.5.1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NoteBase

②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사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 도, 시 · 군 ·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 2022.12.27, 2023.7.18, 2024.12.20, 2025.4.22, 2025.11.11, 2026.5.1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개정 2016.5.29>

NoteBase

③

교정직 공무원은 법정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고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 도, 시 · 군 ·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 2022.12.27, 2023.7.18, 2024.12.20, 2025.4.22, 2025.11.11, 2026.5.19>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NoteBase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 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 · 교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④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므로 소장도 포함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8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 도, 시 · 군 ·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 2022.12.27, 2023.7.18, 2024.12.20, 2025.4.22, 2025.11.11, 2026.5.19>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문 17.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한 가정 내에 장애아동, 학대받는 아내, 치매에 걸린 부모 등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고, 이들 간의 이해가 충돌했을 때 누구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② 의무의 상충－학대받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아동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과 생명보호의 가치 중 어떠한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③ 결과의 모호성－영유아의 해외입양처럼 사회복지사의 결정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④ 권력의 불균형－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 또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때 발생하는 갈등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사례는 비밀보장과 생명보호라는 두 가치 중 무엇을 우선할지 고민하는 **가치의 상충**이다. 의무의 상충은 소속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처럼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책임이 충돌하는 경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은 개입 대상이 여러 명이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누구의 이익을 우선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가정의 장애아동, 학대받는 아내, 치매에 걸린 부모를 함께 돕는 과정에서 이들의 요구와 이익이 충돌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② X: 학대받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아동의 요청은 비밀보장이라는 가치와 아동의 생명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의무의 상충'을 **'가치의 상충'**으로 고쳐야 한다. 의무의 상충은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 책임과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처럼,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의무가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③ O: 결과의 모호성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과가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일지 확신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갈등이다. 영유아의 해외입양을 결정할 때 입양이 아동에게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확실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에 해당한다.

④ O: 권력의 불균형은 전문지식과 서비스 관련 정보를 가진 사회복지사와 도움을 구하는 클라이언트 사이의 힘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의존하고 의사결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면 **알 권리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NoteBase

문 18. 「장애인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은 20세 이상이다.

② 장애인연금의 종류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80수준이 되도록 한다.

④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정답 2번

①

장애인연금의 수급 연령은 **20세 이상이 아니라 18세 이상**이다.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 · 재산 · 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12.11>

②

장애인연금은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분한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
장애인연금법 제5조(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NoteBase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100분의 80이 아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14.5.20>

④

군인연금의 **퇴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퇴역연금을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3항 제2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20, 2018.3.20, 2019.12.10>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NoteBase

문 19.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급여액이 수급자가 낸 사회보험료에 비례하므로 재분배기능이 없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급여를 제공하므로 재분배기능이 약하다.

③ 아동수당은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④ 국민연금은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아동수당은 보험료 납부를 수급 조건으로 삼지 않는 **비기여** 급여이며, 소득·재산 수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급여가 연결되지만, 급여액이 납부 보험료에 단순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며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개인의 평균소득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도 급여 산정에 반영하므로, 같은 가입기간이라면 저소득 가입자가 고소득 가입자보다 자신의 소득 대비 높은 비율의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② 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조세를 재원으로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이다. 저소득층에 자원을 이전하므로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다**. 맞춤형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과 필요를 고려하여 지원한다는 뜻이며, 이를 이유로 재분배 기능이 약하다고 볼 수 없다.

③ O: 아동수당은 수급자에게 사전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지 조사하여 저소득층만 선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령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사회수당이다.

④ X: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를 바탕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가입·납부 이력 등 급여별 요건에 따라 수급권이 정해지며, 빈곤 여부를 가리는 자산조사로 수급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소득을 확인하는 것은 공공부조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20. 모성보호와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60개월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③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허용 받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④ 소득에 관계없이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정답 3번

①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지원한다. 60개월 아동은 이 연령 범위에 포함된다.

②

출산전후휴가는 **산후 회복기간을 최소 45일 보장**하도록 배정해야 한다. 출산 전 휴가를 많이 사용했더라도 출산 후 확보해야 할 기간을 줄일 수 없다.

③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지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하여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한정할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NoteBase

④

2026년의 일반 지급 연령은 **9세 미만으로, 만 8세인 아동도 포함**하며 **소득 요건은 없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5, 2021.12.14, 2026.3.20>

아동수당법 부칙(법률 제21489호, 2026. 3. 20.) 제2조 제1항 제1호
아동수당법 부칙(법률 제21489호, 2026. 3. 20.) 제2조 제1항 제1호
제2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4조제1항 · 제6항 · 제7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1. 2026년: 9세 2. 2027년: 10세 3. 2028년: 11세 4. 2029년: 12세

NoteBase